

# 전국 농지 사상 첫 전수조사...“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

### 내년까지 2단계...“토허구역 심층 대도시 주변 더 엄격” 추경안 국회 보완...늘어난 농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 만전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또 중등 전쟁으로 인해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고 국회 농해수위원회 민주당 간사(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엔 추진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윤 의원은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대도시 주변에 대해서보다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하면 매각 지시도 하고,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활용해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올해 농업 분야 추경 예산(총 8개 사업 2658억원)과 해양수산분야 추경 예산(총 5개 사업 919억원)에 대

해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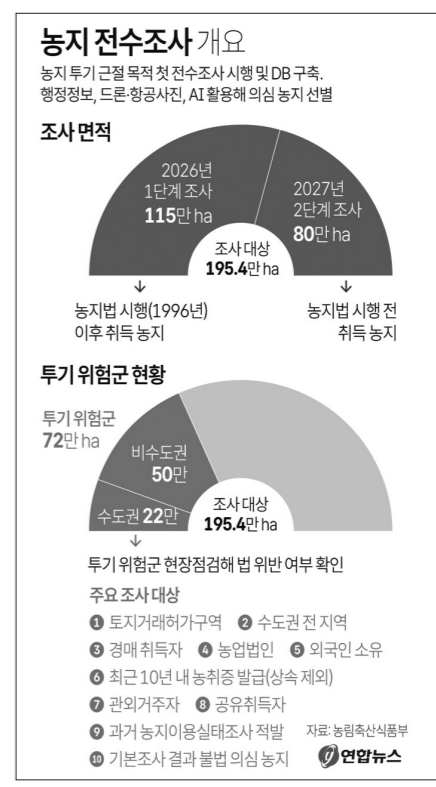
중등 전쟁으로 인해 증가한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보조,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확대 등 농촌 현장의 요구가 많은 사업과 해양수산업계에 대한 유류비 지원,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내는 예산사업의 보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농협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 달 11일 발표한 농협개혁안 이후 추가 검토를 거친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윤 의원은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운영하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항공사 유류할증료 3배 경중 대한항공 최대 30만3000원

중등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이번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전달과 비교해 일제히 최대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40만원 이상의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이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총 33단계 중 18단계(갤런당 320~329센트)에 해당한다.

이는 전달 적용된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가 뛰어오른 것으로, 현재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편도 기준 항공권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하고, 해당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기준 단계가 오를 때 따라 이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대폭 높여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거리에 따라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을 부과했으나, 이번 달에는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 사이를 적용한다.

거리가 가장 먼 인천발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등에는 3.1배 인상된 30만3000원이 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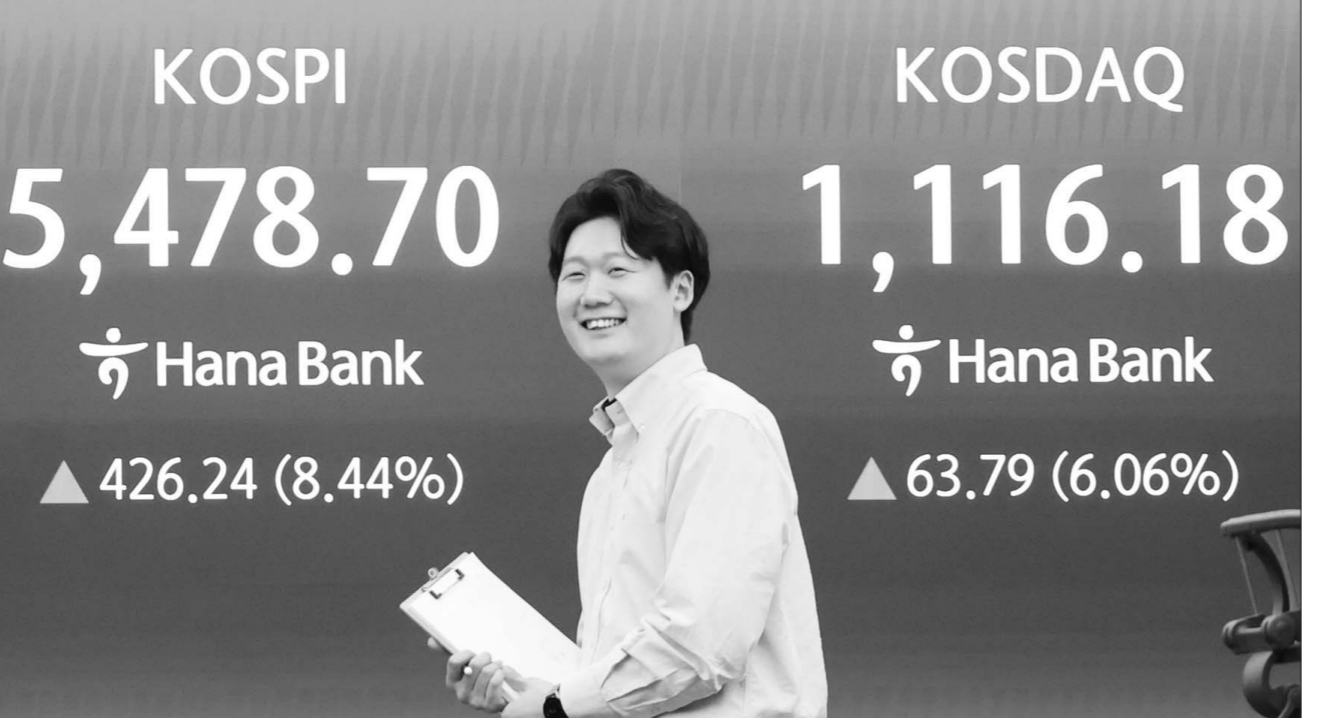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은 유류할증료를 3월 1만4600원~7만8600원에서 이번 달 4만3900원~25만1900원으로 높여 받는다.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받는 제주항공은 3월 9~22달러에서 이달 29~68달러를 부과하고, 진에어도 8~21달러에서 25~76달러로 올렸다. 이스타항공도 지난달 9~22달러에서 29~68달러로 높였다.

화물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책정하는 대한항공은 이날 장거리 기준 kg당 2190원, 중거리 2060원, 단거리 19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나은 450~510원보다 4배 이상 높아졌다.

문제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오는 5월 적용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5월 유류할증료는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에 따라 오는 16일 이후 발표된다. 연합뉴스



코스피, 5거래일 만에 8% 급등 코스피가 1일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에 8% 넘게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6.24p(8.44%) 오른 5478.70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상승폭은 지난달 5일 490.36p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63.79p(6.06%) 급등한 1116.1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급등장에 나란히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주유소용지 첫 분양

### 1998㎡ 규모 1필지...13일 온비드서 입찰 호남고속도로 등 도로망 연결 ‘사통팔달’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미래 지향적 R&D 연구단지로 조성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주유소용지 1필지를 최초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첨단3지구 ‘주유2’ 블록으로 면적은 1998㎡로 건폐율 60%와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일반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첨단3지구는 AI 집적단지와 국립심뇌혈관센터 등 대규모 국공과제가 추진되는 핵심 사업지구다. 해당 주유소용지는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및 13호선, 호남진곡산단로, 빛고을대로 등 전국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요충지에 자리해 접근성이 탁월하다. 입찰은 13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접수한다.

15일 오전 10시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7일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 세부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온비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 만에 이뤄진 제도 개선이다.

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 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주유소용지 첫 분양

### 1998㎡ 규모 1필지...13일 온비드서 입찰 호남고속도로 등 도로망 연결 ‘사통팔달’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미래 지향적 R&D 연구단지로 조성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주유소용지 1필지를 최초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첨단3지구 ‘주유2’ 블록으로 면적은 1998㎡로 건폐율 60%와 용적률 300%를 적용해 최고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일반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첨단3지구는 AI 집적단지와 국립심뇌혈관센터 등 대규모 국공과제가 추진되는 핵심 사업지구다. 해당 주유소용지는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및 13호선, 호남진곡산단로, 빛고을대로 등 전국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요충지에 자리해 접근성이 탁월하다. 입찰은 13일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접수한다.

15일 오전 10시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7일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 세부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온비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언급한 지 약 한 달 만 만에 이뤄진 제도 개선이다.

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대출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 농협중앙회장, 조합원이 뽑는다...직선제 전환

### 2028년부터 조합장 1110명 간선제서 ‘1인 1표’로 출마 자격 강화...이사회 의장 외부인 선임 ‘견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028년부터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지금까지는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에서 187만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면서 회장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금품선거 부작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명 중에서 중복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11일 농협 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품선거 유인 축소를 목표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전문가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체 등을 검토해왔다.

윤원수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조합원만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인단체는 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주권 차원에서 직선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한다.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조합원 자격 정비도 병행한다. 비농업인이나 주·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비용은 직선제 단독 시행 시 170억~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추가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87만명의 지지를 얻고 선출된 중앙회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권한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 중앙회장이 겸직하는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자의 중화회, 계열사 채취권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LH, ‘안전 감시단’ 도입...건설재해 근절

### 고위험 현장부터 내년 2월까지 231명 순차 투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에 ‘안전 감시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적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안전 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으로, 안전 관리자만으로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올해 LH 관리 물량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약 16만1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안전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앞서 LH는 지난해 제해 다발 현장 4곳을 선별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건설 현장 위험 요소 1420건이 제거되면서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우선 고



위험 건설 현장 25곳을 대상으로 안전감시단 제도 운영에 나선다. 이어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치 대상 현장 총 105곳에 안전감시단 231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상호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안전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더욱 신속하게 발굴·제거하고, 심효성 있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안전 경영의지를 전했다. 연합뉴스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